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전략 : 위기를 넘어 선진화로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론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다같이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선두권과 중위권 하위권간에 격차가 벌어진다. 그리고 한번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처지면 여간해서는 상위권으로 진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기 때문이다 다같이 열심히 뛰는 상황에서 하위권 주자가 갑자기 혼자서 속도를 내면서 상위권으로 진입하면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 였다. 1960년 일인당 소득 79달러로서 세계 100위권 안에도 못 들던 국가가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소득 16000여 달러에 국내총생산 규모 8000여억 달러 로서 세계 12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어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노동운동 탄압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위기극복을 이루어낸 후 이제 중진을 넘어 선진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시장 내에서 대략 중진국 상위국가(advanced emerging economy)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점으로 따지면 B+ 라고나 할까. C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제 A를 바라보는 수준에 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의 인구가 4800만명 정도로서 (표 1)에서 보듯 일인당 소득의 세계 순위는 2004년 기준으로 34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1을 보면 대략 일인당 소득 3만 달러정도 이면 20위권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또한 (표2)에서 2004년도 국내총소득 규모를 보면 순위가 미국 1위부터 시작하여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캐나다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중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7개국이 바로 G7인 것을 보면 결국 총 GDP 규모가 국력과 연결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선진경제의 필요조건이란 점도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경제의 선진화는 일인당소득과 총소득 규모가 동시에 감안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약 4800만명 정도이므로 일인당 3만 달러를 달성 시 국민총생산이 약 1조 5000억 달러로서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8위권에 드는 소득규모이므로 선진국의 수준에 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일인당 3만 달러정도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일인당 1만 6천 달러를 달성한 우리 경제가 지금의 2배가량으로 그 규모가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일인당 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총규모가 8000억 달러에 이른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2배를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두 목표를 공유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외환위기후 10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진의 화두를 달성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참여정부의 정책 철학과 문제점

선진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토대로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자유주의적인 시장중심 경제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일정 수준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구성원의 자기책임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동기를 북돋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다시 말해 실패에 대한 관용도 베풀어져야 하는 체제이다. 경제자유도와 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높은 경제자유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인구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이 형평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선부른 형평 추구는 장기적으로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다해가는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형평 균형 분배 등의 이념을 내세움으로써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여 정부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퇴색이 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것은 이러한 평등주의 이념의 역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평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게 되면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게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녀, 학벌, 장애인, 여성,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5대차별 해소라는 구호 같은 정책을 보면 그 한계성이 드러난다. 부당한 차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차이(equalizing difference)는 인정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경력을 관리하는 등 각자가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치열한 노력은 사라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퇴보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이다.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인정을 차별(discrimination)로 치부하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구성원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결국 “뜨거운 가슴”에 바탕을 둔 온정적 간섭주의는 정부에의 의존을 심화시키며 이렇게 평등주의를 추구할 경우 경제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결국 “좌파 신자유주의”의 모순적 구도를 토대로 운영이 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평가가 낙제점에 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의 이념적 지표가 치우친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러한 좌편향적 이념과 제도는 지양되고 자유주의적인 사고와 이념 그리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다.

선진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이 모습과 선진경제 비전 간의 갭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이 선진경제의 비전에는 걸맞지 않게 상당부분 뒤쳐져 버렸다는 점이다. 그러면 외환 위기이후 심화된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몇 가지 흐름과 문제점을 지적해보기로 하자.

III. 최근 우리경제의 흐름과 문제점 : 외환위기이후 나타난 현상을 중심으로

1. 세계화의 진전

현재 전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역시 세계화의 진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을 거역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보면 이 흐름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명과 암을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는 무역장벽 덕분에 전 세계를 누비며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점이다. WTO체제가 우리

에게는 상당 부분 이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세계화의 흐름은 많은 그늘도 드리우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의 흐름은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금융부문의 경우 자본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국부유출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품에 대한 무역으로 번 돈이 금융부문을 통해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영리적 시각이 아닌 평등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우 고급의료부문이 발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급의료 수요를 상당 부분 해외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경쟁력이 거의 없는 관광산업의 경우 국내관광보다는 해외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뿐만아, 세계화가 진전되는 데도 평준화라는 구호로 인해 고급교육 명품교육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바람에 자녀의 해외교육을 위해 부인까지 해외로 보낸 후 외롭게 국내에서 지내는 소위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는 모습은 세계화의 흐름에 뒤쳐진 분야의 존재가 어떻게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인력들의 경쟁력이 국내에서만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인력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해외교육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진전이 가져오는 또다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노동(labor)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시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 시간등 양적인 투입보다는 산출 즉 성과에 근거한 보상체계가 일반화 되어간다는 점이다. 자본의 가치는 성과로 판단된다. 결국 몇 시간 일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만들어냈느냐가 보상체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이를 위해 연봉제 성과급제 계약제등 다양한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마치 프로야구선수처럼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스템이 가진 장점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퇴직문제 고용불안 문제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2. 노령화의 가속화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노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령화 문제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노년과 청장년 간의 비율이 급격히 바뀌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노령화 비율이라 하는 데 이 비율이 7%를 넘어서면 노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곧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고 이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노령화가 되어버린 사회 곧 노령사회(aged society)라 부른다. 우리의 경우

이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서더니 급격한 속도로 14%를 향해가고 있다. 이대로 라면 2019년에 14%를 넘어설것으로 예측되므로 19년만에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 가 되는 셈인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일생 동안 축적한 자산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는 인구도 있지만 역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일을 못하면서 각종 보조를 받아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재정면에서도 세금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을 늘이는 요인이 되며 특히 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수입이 줄어드는데 연금 지급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야할 청장년계층과의 세대간 갈등의 요인 까지 제공하는 등 사회불안요인이 된다. 14%가 되는 2019년까지 충분한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야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3. 양극화의 심화

주지하다시피 양극화는 현재 우리경제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다. 중산층이 줄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20%의 인구가 80%의 부를 향유한다는 소위 20-80법칙이 현실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그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등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이 분배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고 최근의 양극화 심화는 성장의 결핍내지 부족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가 악화되면 제일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적 약자들인데 이에 비해 강자들은 그런대로 버틸 힘이 있으므로 양극화는 심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양극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가야 하겠지만 이를 풀어갈 기본적인 해법 또한 경제성장의 촉진과 선진화의 달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부부문의 팽창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이유로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다. 단적인 예가 공무원 수의 증가이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체 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 때보다 5만여명 (4만 8499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2005년 직원수가 3만명을 넘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으로써 공무원의 숫자에서 빠진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숫자의 증가 폭은 사실상 8만명에 육박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친 전체 공무원은 2005년말 현재 93만 3663명으로

국민의 정부 임기 말(2003년 2월)의 88만 5164명보다 5.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1.7조원이었던 공무원 인건비가 2006년에는 20.4조원까지 상승하였고 2007년에는 21.8조원으로서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다.

공공부문이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비대화되고 재정 운영이 방만해지면서 2000년 112조원 정도였던 국가채무는 2007년 말에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7년만에 그 규모가 3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 채무잔액은 2004년 31.9조원에서 2005년에는 40.9조원으로 한 해 동안에 9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각종 공무원 조직 신설과 정원 증가, 고위직 공직자 증가로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경비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5. 공적연금의 부실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인데 이중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면서 정부재정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전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514억원에서 해마다 늘어나 2006년 9261억원까지 늘어나고 2007년에는 9921억원이 들어가며 2008년에는 드디어 1조800억원이 투입되어 1조를 넘게 되어 있다. 2001년부터 적자를 낸 공무원연금에 정부 예산이 보전해 주는 금액은 2003년 548억원으로 시작해 2006년에는 8452억원, 2007년 9725억이 투입되며 2008년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두 연금을 합쳐 일년에 보전해 주어야 할 액수가 2조원을 넘으면서 계속 증가추세로 가게 되어 있다. 또한 노령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47년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갈시점을 2065년으로 늦추기 위해 많이 걷고 적게 주는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고갈시점이 늦추어졌을 뿐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6. 저투자 저성장 고실업 기조의 정착

IMF위기 이후 10년동안 기업 부문 특히 대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는 상당 부분 위축되었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부채비율은 99.5%로 세계 주요기업의 부채비율 182.3%보다 82.8%p나 낮다. 또한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유동비율은 124.2%로 세계 주요기업의 비율 99.7%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2년간 그 격차

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대표기업들이 투자확대보다는 현금 보유비중을 더 늘린 데 기인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아도 비교대상이 된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음식료 화학 철강 등 6개 업종에 걸쳐 국내 대표기업의 부채비율은 모두 세계 주요 기업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철강 및 전기전자업종에 속한 국내 대표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57.4%, 79.6%로서 100%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분야의 세계 주요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철강업종도 133.9%로서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 후유증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노후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4대 불안 심리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떤 상품가격의 상승은 공급의 감소 또는 정체 혹은 수요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을 늘이는 동시에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금폭탄을 통한 수요 줄이기로 요약이 된다. 그러나 과거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동시에 높여 놓음으로써 매매시장에서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3년 동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9.3%이며 서울만 보면 15%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집값 상승률은 7.6%로 서울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3년 2개월간 누적상승률이 7.6% 임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상승률은 아니다. 또한 서울에서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은 21.4% 인 반면 강남이외지역은 4.6%이다. 4.6%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일종의 국지적 현상으로 보고 국지적인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이를 전체 국가적 정책과제로 삼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거래량이 정상적인 이사수요마저 줄어드는 가운데 국민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실했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토대로 “편가르기”를 시도하면서 피아를 구분함으로써 지지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부동산 정책이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8. 중국경제변수

2006년 기준 중국의 GDP는 약 2조 6000억 달러로서 세계 4위를 달성하였다. 중

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연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통해 8년여 만에 경제규모가 2배씩 증가하는 괴력을 보이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20 년경 6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2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술입국의 기치를 걸고 신기술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중화학 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공작기계 등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 산업분야가 모두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는 수출주도산업이라는 데에 있다. 중국이 이들 산업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굳힌다는 것은 우리경제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내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이러한 수출제품의 디플레이션은 한국경제의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이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성공시킬 경우 한국경제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재앙적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Steven Roche)의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의 팽창에 대한 국가적 과제와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IV.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필요한가 :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현상에 대한 진단은 곧 처방과 연결된다. 우리 경제가 선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와의 갭을 매워야 하는데 앞에서 본대로 가장 큰 과제는 일단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소득이 낮은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지금의 두 배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 물론 경제의 선진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파악될 수도 있고 달성되어야 할 상태 내지 목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어떤 쪽으로 해석되더라도 국민소득의 획기적 증가는 매우 절실하고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래에 와서 성장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잘못된 부분을 손본다며 너무 고치는 데에 열중하다가 향해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반기업정서를 포함하여 기업의 투자욕을 꺾는 조치들이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남발되면서 저투자 기조가 정착되었고 이는 곧 저성장 고실업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상당한 침체를 겪게 되었다. 특히 내수가 침체되었고 결국 수출이 경제를 외롭게 끌어가는 외끌이 경제기조가 정착되었다. 또한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일자리문제 노후문제 등 4가지 변수는 우리 경제

에 4대 불안 심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제의 선진화가 국민들이 더불어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특히 일자리 창출, 편안한 노후를 위한 각종 안정장치의 마련, 그리고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포함 상당한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사유와 자유의 화두

과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사유와 자유의 원리에 대한 준수와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경제 내에서는 이러한 사유와 자유에 대한 존중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나친 평등지향성도 지적이 되지만 이를 개선해나가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가 오히려 반시장적이고 지나치게 평등지향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당장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 및 교육과 관련한 정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소위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면서 세금폭탄을 난발하고 평준화를 금과옥조처럼 유지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번뜩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격을 낮춘다며 세금폭탄을 부과했지만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아예 jd들게 만들고 지방부동산시장은 아예 꿈꿨던 얼어붙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풍선을 바람이 많다고 느낄때 이를 터뜨리는 것은 바늘하나면 된다. 하짐니 이를 터뜨리지는 않은채 바람만 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 정부정책도 이처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달래는 듯 혼내는 듯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한데도 무차별적인 정책을 쏟아부음으로써 결국 풍선을 터뜨리는 수준의 결과가 나온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평준화를 지속시킨 결과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부담이 늘게 되었고 결국 비싼 사교육비를 조달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모습이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은 이제 사라지고 있고 가난한 집 “똥똥이” 보다는 부잣집 “떨떨이”가 더 잘나가는 양극화의 흐름 계층간 이동이 멈추는 질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명분만 좋다고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수단이 목표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당장은 목표와 조화가 안 되는 듯 보이는 정책수단이 오히려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경향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공유와 평등”보다는 “사유와 자유”를 근간으로 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며 이는 그 자체로서도 경제선진화달

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2. 성장엔진의 재가동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아울러 투입요소로서의 자본과 노동의 양과 질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의욕(자본)과 근로의욕(노동)을 고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급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나 소득세율의 인하를 통한 의욕고취가 매우 절실하다. 공급중시경제학의 래퍼커브 이론에 의하면 세율이 0%일 경우 세금수입이 0이 되지만 세율이 100%가 되어도 세금수입은 0이 된다. 버는 소득을 모두 다 걷어 가면 아예 투자도 근로의욕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로 버는 소득의 세율로서의 한계세율은 매우 중요한데 한계세율이 높아진다면 더 많이 소득을 올리려는 유인을 줄여버림으로써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약 40%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법인세도 25%로서 과거보다는 줄어들이는 했으나 아직도 인하의 여지가 많다.

또한 우려스런 것은 국내 대표기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2005년 중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5.8%로 세계 주요기업의 증가율인 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4년의 24.1%에 비해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화학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 대표기업의 성장성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업종 중 자동차의 경우 세계 대표기업 중 가장 부진한 미국 GM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인 것에 불과하고 화학업종은 호남석유화학이 종속기업을 신규 편입한 데에 따라 성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미래의 씨앗뿌리기로서 가장 중요한 R&D투자의 경우 국내 대표기업의 2005년 중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준)이 3.2%로 세계 주요기업의 3.4%를 다소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을 보면 통신업이 2.2%로 세계 주요기업(1.2%)보다 1%p 높게 나타났으나 화학(국내 1.3%, 세계 3.6%) 및 자동차(국내 1.8%, 세계 4.1%)업종은 국내 대표기업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환위기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명분을 위주로 하여 강화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가 시급한데 예를 들어 기업소유 지배구조개선만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도입되어 있는 수도권규제 같은 대표적인 투자 제한 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 폐지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수출과 내수간 괴리극복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2006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253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가 6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전체와의 무역에서 310억 달러이상의 흑자를 내고 그 중 250억 달러를 일본에 지불하고 부품과 소재를 사오는 구조가 정착되어 버린 셈이다. 더구나 엔화가 절하되면서 수입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마우지를 이용한 고기잡이에서 어부는 배고픈 가마우지를 끈에 묶어 물속에 넣어 고기를 삼키게 한 후 끌어올려서 뱉어내도록 유도를 하여 고기를 잡는다. 어부는 일본이고 가마우지는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육성결핍에 따른 부작용도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내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출과 내수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주요 소재와 부품이 수입이 되다보니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물론 투자가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4. 기업탈출의 억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과단성 있는 정책의 마련

최근 추세는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 최적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국가로 입지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많은 정부중 하나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 정부나 지자체와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 끌어당기기를 위한 노력은 엄청나다. 일본도 일본판 수도권 집중억제제도인 “공업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각각 2002년과 2006년에 폐지하였다. 기업 투자 관련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 억제책을 철폐한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제 글로벌 시대에 기업은 최적입지를 찾아 얼마든지 세계를 누빌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로서 우리나라의 10만 ㎢의 4배 가까이 된다.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인 국가도 수도권 억제가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제 지방 균형을 내세우며 땅값을 올리고 결국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보다는 국토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각각의 지방에 맞는 특색 있는 개발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되 일정 부분 지자체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발전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가 왔다.

5.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 : 공급자 소비심리 제고 유인

15년간에 걸친 불황을 뚫고 최근 경제회생에 성공한 일본에서 고이즈미 정부는 자기 스스로 살을 깎는 자기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공공부문 스스로 자기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우선 도로, 우편 등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사업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사업을 민간에게 적극 개방하였다. 또한 특수법인 합리화 계획에 의거 163개 특수법인 중 16개를 폐지하고 36개를 민영화하는 등 총 136개 공공법인에 대해 폐지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2004년 12월에는 총 56개 독립행정법인을 32개 법인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25개 법인의 약 8300명 임직원을 공무원직위에서 해제함으로써 공무원 인건비의 절감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31개 특별회계를 절반으로 감축하였고 8개 정책금융기관을 민영화하고 통폐합하여 1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중앙정부 조직을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으로 줄이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병도 추진하였는데 1999년 3232개였던 지자체가 2006년 기준 1822개로 감소하였다. 일본정부가 분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부문은 줄어들어야 한다. 필요한 서비스는 되도록 민간부문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일 잘하는 정부가 아니라 “작고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노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금수입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세금을 써야할 대상은 자꾸 늘어나는 경향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돈을 벌어서 쓰는 조직이 아니다. 걷어서 쓰는 조직이다. 정부가 걷는 액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민간부문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구축효과를 감안하여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동시에 단행함으로써 정부부문의 조직과 인력(행정개혁) 그리고 자금(재정개혁)에 대해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중기청이 없어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6.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패키지의 실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규모가 6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규모를 해당기업 순자산의 40%까지로 제한하는 주식보유총량제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입된 지 약 20여년이 지난 제도로서 그간 제도의 목적이 경제력집중억제에서 재무구조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변해오면서 점점 제도의 효과와 영향이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이고 선별적 규제이고 누더기규제가 되어가고 있다. 출자가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를 무시한 채 해당되는 모든 기업의 출자를 일단 산업이나 분야

에 상관없이 규제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규제이며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규제이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느라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조항을 계속 늘여온 결과 해당 출자 중에서 60%가 면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더기 규제가 되어 버렸다.

과소투자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투자에 이르는 첫 단추를 막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출총제의 모델이 된 일본의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는 결국 2002년 11월 일본에서 폐지된바 있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들은 일단 폐지하되 구체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공정거래 제도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경쟁촉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중억제”가 “경쟁억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억제와 관련한 정책들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등으로 이관하고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담당하는 법으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7. 서비스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2006년 관광과 교육 부문의 수치적자규모는 130억 달러로서 전체 서비스수지적자 규모 187억 달러 대비 6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13조원은 GDP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이들 적자를 없애면서 국내에서 이를 소화시킬 수 있다면 단순비교로도 성장률이 2%p 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교육 보건의료 금융 관광 산업을 4대 유치산업으로 지정하여 유치산업에 대한 특별 산업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치게 평등지향적 논리만을 토대로 한 논의를 지양하고 명품교육 명품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이에 비해 국내교육을 받겠다면 유학을 위해 국내로 유입되는 숫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이민세관국의 통계를 보면 2006년 3월 기준 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중고등 학교와 대학교(대학원 포함) 학생의 숫자는 한국 8만 7천명 정도로서, 인도 6만 8천명, 중국 5만 4천명, 일본 4만 9천명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통계만 따로 보면 우리나라 유학생의 숫자가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3위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해외중등교육수요는 확실한 1위를 기록하는 셈이다. 결국 하나의 산업부문으로서의 교육 서비스부문은 엄청난 수입초과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바 2006년 통계를 보면 여행수지 중에서 유학 연수와 관련한 적자는 44.3 달러로서 2004년 25

억달러 적자에서 2005년 33억 적자에 이거 그 적자규모가 매년 10억 달러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매년 1조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후장대(重厚長大)로 대표되는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우리 경제가 금융 교육 관광 보건의료 등 대표적 서비스 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뒤로 처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류 흐름 등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사회의료라는 명분하에 일방적 가격통제로 발전이 저해되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절한 수준의 영리의료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급의료 명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고객을 유치하는 등 의료보건서비스의 고급수출산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선택권확충 제도의 도입 및 기타 지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과 육성책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해나갈 필요가 있다.

8.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현재 국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서 상승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은 2000-2005년 평균 8.23%로서 영국의 15.47% 미국의 11.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전기전자산업의 성장기여율은 27.8% 통신운수창고는 13.6% 정도의 기여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산업의 성장기여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 취업자 비중은 총취업자 중 3.4%로서(79만명) 미국의 4.5% 영국의 4%에 비해 낮은 편이고 금융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금융업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매우 양질의 일자리로서 젊은 대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이다. 따라서 금융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금융산업의 법인세 신고금액은 전체 법인세의 13%로서 부가가치 비중(7.5%)에 비해 높은 편이며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율(= 100%-중간투입률)은 71.1%로서 기타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융업은 후방연쇄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이다. 철강산업이 발전하면 이를 사용하여 조선과 자동차가 발달하듯이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다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품소재 산업적 역할을 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런데 현재 금융산업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National Index)는 한국이 4.3%로서 미국 24.7% 영국 40.3% 프랑스 37.5% 독일 42.7% 네덜란드 48.1% 등에 비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TNI 지수는 금융산업에서 해외자산/총자산 비

율, 해외수익/총수익 비율 및 해외인력/총인력 비율을 평균한 수치).

이제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통합법의 제정과 시행, 금융정보고속도로의 구축, 한국형 헤지펀드의 설립, 금산분리 정책 폐지, 범한류자본 육성책 마련 등 금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육성책을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Core Competence)인바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영 전략에도 눈을 돌려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에의 전략적 진출 등의 방안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자꾸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25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5월에는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전년도 29위에서 9계단이나 하락한 38위라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얼마 전 유명한 경제분석가인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는 “지금부터 4~5년이 한국에게 중대 고비다. 이 기간에 성장잠재력을 못 키우면 한국경제는 설 땅이 없다.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더욱 높이는 데에 실패하면 중국의 변방 혹은 필리핀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는 메시지를 던진바 있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경우 지나친 보수적 경영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부채비율이 100%에도 못 미치고..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주요기업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세계 주요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불길한 소식들이며 동시에 새겨들어야 할 얘기들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레이 클라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한 국가의 힘의 원천을 나타내는 공식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가 제시한 공식은 $P = (C + E + M) \times (S + W)$ 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P는 국가의 힘 C는 영토넓이와 인구 숫자 등 국가의 물리적 규모에 관련된 변수이고 E는 경제력, M은 군사력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S는 국가전략, W는 이를 따르는 국민의 의지를 나타낸다. (C+E+M)은 유형의 국력을 나타내고 (S+W)는 무형의 국력을 나타낸다. 결국 유형과 무형의 국력을 곱한 것이 총체적 국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우리의 국력이 어디서 오나. 역시 경제력 아닌가. 세계 109위 수준의 좁은 국토와 세계 25위의 인구 숫자를 보면 국가의 물리적 규모변수는 한심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의 전략과 국민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에 성공한 결과 오늘날 경제규모가 세계 12위를 자랑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힘들게 키워낸 기업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노화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국가경쟁력, 나아가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공헌 중 하나는 바로 좌파적 이념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데에 대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C는 매우 작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경제력(E)을 키우고 국방력(M)을 키우면서 국가의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우리 경제는 충분히 선진경제로 진입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뛰어야 할 때가 왔다. 자유와 사유를 중시하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한국경제의 선진화가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1> 일인당 국민소득

순위	국가명	지표값	세계비중 (%)	전년도순위	전년도지표 값
1	룩셈부르크	56,230	-		
2	노르웨이	52,030	-		
4	스위스	48,230	-		
5	미국	41,400	-		
6	덴마크	40,650	-		
8	아이슬란드	38,620	-		
9	일본	37,180	-		
10	스웨덴	35,770	-		
12	아일랜드	34,280	-		
13	영국	33,940	-		
14	핀란드	32,790	-		
15	오스트리아	32,300	-		
16	네덜란드	31,700	-		
17	벨기에	31,030	-		
18	독일	30,120	-		
19	프랑스	30,090	-		
21	캐나다	28,390	-		
22	홍콩	26,020	-		
23	호주	26,900	-		
24	이탈리아	26,120	-		
25	싱가포르	24,220	-		
26	스페인	21,210	-		
27	뉴질랜드	20,310	-		
28	쿠웨이트	17,970	-		
29	사이프러스	17,580	-		
30	이스라엘	17,380	-		
31	그리스	16,610	-		
32	바하마	14,920	-		
33	포르투갈	14,350	-		
34	한국	13,980	-		
35	바레인	12,410	-		
36	슬로베니아	11,870	-		
37	몰타	12,250	-		
38	사우디아라비아	10,430	-		
39	안티가 바부다	10,000	-		
40	바베이도스	9,270	-		

<표 2> 국가별 GDP 규모와 순위

순위	국가명	지표값	세계비중(%)
	전체국가	408,860	100.00
1	미국	116,675	28.54
2	일본	46,234	11.31
3	독일	27,144	6.64
4	영국	21,409	5.24
5	프랑스	20,026	4.90
6	이탈리아	16,723	4.09
7	중국	16,493	4.03
8	스페인	9,914	2.42
9	캐나다	9,798	2.40
10	인디아(인도)	6,919	1.69
11	한국	6,797	1.66
12	멕시코	6,765	1.65
13	호주	6,313	1.54
14	브라질	6,049	1.48
15	러시아 연방	5,824	1.42
16	네덜란드	5,773	1.41
17	스위스	3,595	0.88
18	벨기에	3,498	0.86
19	스웨덴	3,464	0.85
20	터키	3,020	0.74